
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

2018. 12. 18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목 차

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19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	3
III. 2019년 중점 추진과제	5
1. 농업·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	5
2. 스마트(첨단) 농업 확산	8
3. 공익형 직불제 개편	11
4. 신재생에너지 확대	13
5. 생산자·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	15
6.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·환경관리 강화	18
IV.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	21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- ◇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가축질병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
- ◇ 청년 영농정착,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확산, 축산안전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 마련

① (고용증가) 농림어업 분야 고용이 '17년 3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,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59천명 증가하여 고용안전망 역할 수행

- 2·30대(13천명)와 60대 이상(57천명)에서 크게 증가하였고,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'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'도 10천명 증가
- 청년층 농업·농촌 정착을 위해 농지·자금·기술 등 지원을 체계화하고,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확산, 법인 취업 지원 등 농식품 분야 취·창업 뒷받침

② (수급안정) 선제적 수급관리와 재해대응으로 농촌경제와 국민생활 안정

- 쌀은 지난해 수확기 선제적인 시장격리(37만톤)로 20년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산지가격 상승



- 금년 이례적인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양곡 공매 실시(11월 5만톤)로 최근 안정세 유지

- 봄철 냉해,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도 긴급 급수·약제 지원, 채소 수매 비축과 계약물량의 탄력 방출로 가격 급등세 진정

* (사례) 7~8월 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(평년 대비 40%↑)하였으나, 1일 유통량의 5% 수준인 100톤을 매일 출하하여 9월부터 가격 상승세 진정(평년대비 3.2%↓)

- 농가에는 재해복구비 인상('17: 실거래가의 52% → '18: 66%)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('17: 53 → '18: 57개)로 경영 안정에 기여

③ (식품안전성 제고) 계란 살충제 검출사건을 계기로 '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'을 수립(부처합동, '17.12)하고,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

- 전체 산란계 농가(1,500호) 살충제 검사 실시, 축사 내 잔류 농약의 세척·설비교체 지원, 방제용품 도입으로 계란 안전성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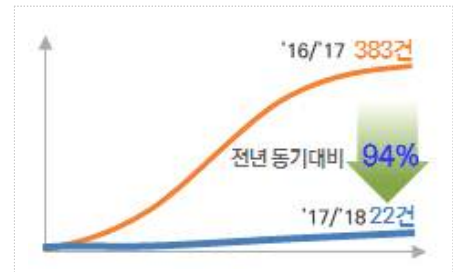
* 계란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 : ('17) 78호 → ('18) 9 (88%↓)

-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*하고, 소비자가 사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표시제 도입(식약처 협업)

* 마리당 0.05㎡ (B5 사무용지 넓이) → 0.075㎡ (A4용지 넓이 이상)

- 농약 등 위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농산물 부적합률 감소('17:1.9%→'18.11:1.4)

④ (가축질병 최소화) 조류 인플루엔자(AI) 발생이 대폭 감소(383건 → 22)했고, 구제역은 돼지에 최초 발생한 유형임에도 2건으로 차단



- 예년보다 1~2일 빠른 이동중지명령, 반경 3km 엄격한 살처분 등 신속 초동 대처와 오리사육제한(전체 마리수의 37%)이 조류 인플루엔자(AI) 감소에 기여
- 돼지에서 미접종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사전에 비축한 백신으로 긴급 대처

⑤ (국격 제고) 식량원조협약(5만톤), 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(1.2만톤)로 아프리카 난민, 아세안국가 이재민 지원 등 식량안보 협력 강화

◇ (아쉬운 점) 쌀값안정, 살충제 계란사태 후속조치, 가축질병 방역 등 현안해결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 미흡

- 쌀 등 농산물 가격, 쌀 목표가격 재설정, 농산물 안전성 이슈 등 갈등 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 부족 지적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

1 정책 여건

①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청년농의 혁신동력 역할 기대

- 농가 중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은 58%(전체가구는 20.7%), 40세 미만은 0.9%(전체가구는 23.4%)에 불과
- 청년농들은 전문적인 영농지식을 습득,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등 고부가가치 농업을 통해 높은 소득 거양

◇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: 2018년까지 4,733명의 졸업생 배출, 평균 연령 31.8세, 평균소득 8,954만원(일반농가 소득의 2.3배) 창출

② 농업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농외소득 지속 증가

-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애로, 과잉생산·재해로 인한 소득 불안 문제가 지속
- 그러나 가공, 유통, 서비스 등 특화산업 발전으로 일자리와 소득원 확대
 - *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(매출액) : ('15) 802명(13.3억원) → ('18.11) 1,454(17.2)
 - *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(%) : ('05) 32.4 → ('10) 40.3 → ('17) 42.5

③ 도시민 의식조사 결과('17, 농촌경제연구원), 국민들은 농정 우선 과제로 '가격 안정과 유통혁신(17.6%)'에 이어 '안전·안심 먹거리 공급(16.9%)'을 꼽음

- 친환경 농업, 농식품 안전성, 품질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
-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 이후 농식품 안전 관리, 농축산물 사육·재배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상황

2

2019년 정책 추진방향

□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'사람중심의 농정개혁' 본격화

- (농업) 경제적 가치 중심 → 공익적 가치로 확장
- (농업인) 농산물 공급자 →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
- (정책) 농업 생산 기반, 쌀 중심 → 청년·혁신농 등 사람 중심 농업 육성

□ 2019년에는 6개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

- ①청년 일자리 창출과 ②스마트(침단) 농업 육성으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견인
- ③직불제 개편, ④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
- ⑤로컬푸드(지역 먹거리) 활성화와 ⑥농축산물 안전·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체계 구축

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

- 1 농업·농촌 일자리 창출
- 2 스마트 농업 확산

농촌공동체 활력 유지

- 3 공익형 직불제 개편
- 4 신재생에너지 확대

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생산체계구축

- 5 로컬푸드 체계 확산
- 6 농축산업 안전·환경관리

Ⅲ. 2019년 중점 추진과제

1 농업·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

가. 최근 농업분야 고용 증가 원인

- (사회·경제적 경향)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·귀촌 증가
 - 장년층은 은퇴 후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며, 청년층은 직업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농업에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분석
 - * (연령별 주요 귀농사유) 30대 이하: 농업 비전(23.1%), 60대 이상: 자연환경(41.5%)

◆ 선진국도 근교 농촌 개발 전후세대(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) 은퇴에 따라 농촌 이주 증가한 경험

- ▶ (영국) 1981년~2001년간 농촌 인구가 12.4% 증가(벨기에, 독일, 스위스 등도 유사)
- ▶ (일본) 단카이 세대(1945~47년생, 베이비붐 세대) 중심으로 농촌으로 이주가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 연간 6만 명 정도가 귀농·귀촌

- (농업 구조적 변화) 농업경영체가 규모화하고 농업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'상용근로자'와 '임시근로자' 채용 수요 증가
 - * '12~'17 농업법인 증가율: 영농조합법인 32%, 농업회사법인 177%
- 농업경영체 사업 범위가 가공·유통·서비스업까지 확장되면서 농업 전후방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
 - * 농업법인 고용실태 조사 결과('18.12), 지난 1년간 조사 법인의 60.4%에서 고용 증가, 매출증가(49.5%)와 사업영역확대(43.9%)가 주요원인(중복응답)
- (정책 지원) 청년 영농창업과 고용 지원 확대 등 유입 동력 강화
 - * 청년 영농정착지원, 농업법인 채용, 귀농·귀촌 활성화,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확산 등

<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 (전년동기대비, 월평균, 천명) >

	<'17 상반기>		<'17 하반기>		<'18.1~11>
(전 체)	-12.3	⇒	24.6	⇒	58.6
(자영자+무급종사)	- 6.0	⇒	24.4	⇒	57.4
(상 용 근 로)	6.0	⇒	6.5	⇒	5.3

나. 추진계획

◇ 청년 취·창업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,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·농촌 고용역량 지속 확충

* 청년층 농업 창업·취업자(누적): ('18) 1천8백명 → ('19) 3천7백명 → ('22) 1만명



□ (신직종) 새로운 자격·직종을 도입하고, 고용 제도화 등 일자리 기반 확충

< 농식품분야 2019년 도입 예정인 자격·직종 >

- ▶ 동물간호복지사: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, 진료 보조(수의사법 개정)
- ▶ 산림레포츠지도사: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지도, 안전관리(산림휴양법 개정)
- ▶ 양곡관리사: 정부양곡 품위(보관도정) 관리, 미곡종합처리장(RPC)·임도정공장* 컨설팅(민간자격 신설)
- * 임도정공장 : 곡물 가공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도정 공장
- ▶ 가축방역위생관리업: 축사 청소·소독, 해충 방제(신고업종,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)

- (고용 제도화) 정부양곡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'양곡관리사'를 채용하고, 자격 소지자만 동물간호복지 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
- (채용 지원) 국가 운영 레포츠시설에 '산림레포츠지도사' 직접 고용('20), 미곡종합처리장(RPC)에 '양곡관리사' 채용 혜택 제공
- (서비스 대중화) 도시농업관리사('17년 도입)를 활용한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지원 및 건축물의 '그린 인테리어(식물 실내장식)' 활용 활성화

□ (공동체 기반 일자리) 농촌 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

- 농업·농촌 사회적 경제조직*을 통해 공동체 활동에 기반한 고용 창출
- *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 5,045개 경제조직이 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, 식품 제조·판매, 환경·에너지, 의료·보건 분야 등에서 활동('17)

- 농업활동을 통해 치유·돌봄·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확대('18: 9개소 → '19: 18)하고, 안정적 경영 지원
-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(관계망) 구축 및 귀촌인 대상 농촌 일자리 연계 기반 구축

<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 : 행복농장 협동조합(충남 홍성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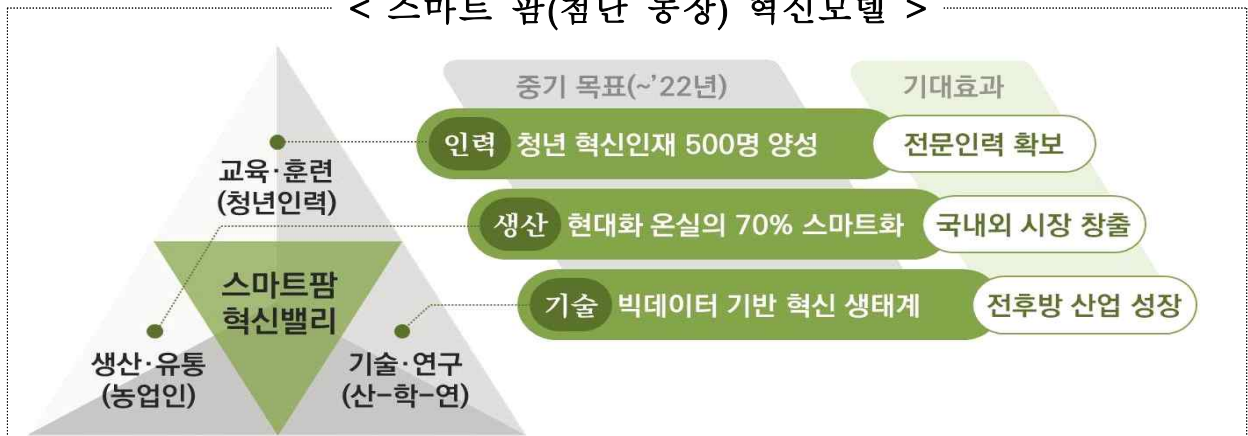
- ▶ 중증 장애인이 허브·쌈채소를 생산하는 재활·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교육생 중 일부는 자립하여 농장과 지역에서 고용('18년, 2명)
- ▶ 지역 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장애인과 동행·모니터링하고, 지역주민들이 농업교사로 참여

-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산업 및 신(新) 활력 지구 확대, 농촌 유희시설의 창업 공간 제공('19 : 20개소)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
- (청년) 농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, 주거·복지 등 생활 여건을 조성해 청년 정착 지원
- 청년들이 농업에서 직업적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농고·농대 실습 교육 강화, 농업 진출 대학생 특별장학금 신규 지원('19: 500명)
- 기반·판로 등 농업분야 취·창업 애로를 해소하고, 직업 안정성 강화
 - 영농 창업기반이 부족한 청년에 대해 자금·농지 지원을 강화하고, 스마트 팜(첨단 농장)·농식품 벤처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창업 기반 조성
 - 지역단위 유통체계 활성화와 연계하여 중소규모 청년농 판로 확충
 - 영농 취업 희망 청년에게 법인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지원('19: 120명)
-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('19: 신규 1,600명)을 지원하고, 지원 실적과 의무 이행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
- 문화·보육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청년 주거 단지 시범조성('19: 4개소, 120세대) 및 청년 창업농들의 자율적 네트워크(관계망) 조직 활성화

가. 스마트(첨단) 농업의 필요성과 과제

- 스마트(첨단) 농업은 안전성·균일한 품질 등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최적 대응
 - 데이터(자료) 기반의 정밀한 환경 제어와 생육 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,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·수출하는 체계
 -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(ICT)과 우수한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도 세계와 경쟁하는 유망산업으로 도약
 -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보급 면적은 증가 추세이나,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순·편이형이며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(4.5년)도 여전
 - 전문 인력, 빅데이터(거대 자료), 산·학·연 네트워크 등 산업 기반도 취약
 - 스마트 팜 혁신 벨리(첨단 농장 혁신 단지)*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업과 연관 전후방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
- *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집적화(생산단지), 청년창업(보육센터·임대 스마트 팜(첨단 농장), 기술 혁신(실증단지),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어, 농업안·기업·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

<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혁신모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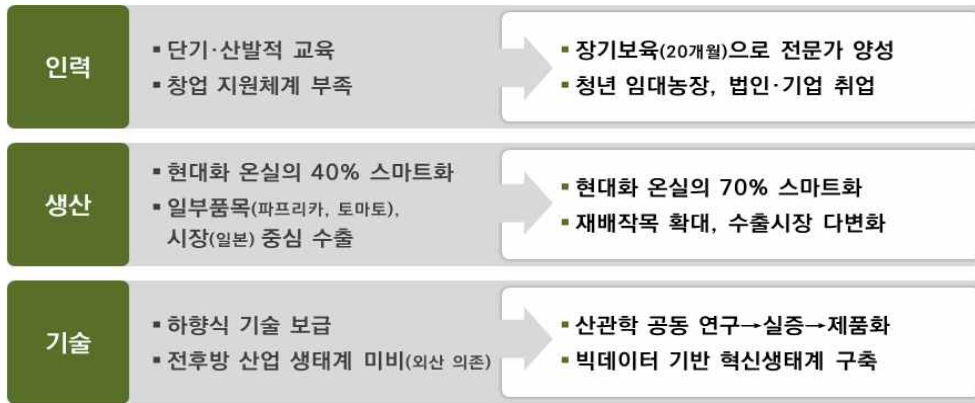


나. 추진계획

◇ 스마트 팜 혁신 벨리(첨단 농장 혁신 단지)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설 원예농업 첨단화

* 추진일정 : ('18) 2개 선정 → ('19) 추가 2개 선정 → ('22) 4개소 완공

◇ 농업과 정보통신기술(ICT)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 창출



[혁신 벨리(혁신 단지) → 혁신 생태계 조성 → 새로운 시장 창출]

- 스마트팜 혁신벨리(첨단 농장 혁신 단지) 1차 선정지(김제·상주)는 '19년 상반기 기반 조성 착공, 2차 대상지 추가 선정('19.초, 2개소)
 - 1차 선정지의 경우 보육센터, 임대형 스마트 팜(첨단 농장)과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을 '20년까지 완료

전북(김제)	경북(상주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생명 연구개발 기반(농진청-종자센터-식품클러스터) 활용한 신품종기능성 식품 개발 · 기존 노후 온실의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전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주력품목 수출 가점화 로봇자동화 · 주거시설, 문화거리 조성 등으로 청년 유입-성장-정착 지원 모델 구축

-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'22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500명 양성
 -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청년 창업보육생을 선발('19: 100명)하여 전문교육 제공, 기반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조성('19~'21년, 24ha)
- 스마트 팜(첨단 농장)에서 생산되는 신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시장을 일본에서 아세안 등으로 **다변화**('19: 태국·베트남 등 K-Food Fair 개최)

-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전후방 기업(기자재·식품·생명)이 농업인·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·기술 개발 활성화
 -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 협의체를 구성('19.초)하여 기능성·아열대 작물 시험재배,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등 추진
- 스마트 팜(첨단 농장)에서 생산되는 생육·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(거대 자료)를 공유·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(기반) 구축('19~'21년)
 - 혁신 밸리(혁신 단지) 내 양질의 빅데이터(거대 자료) 확보를 위한 수집 표준을 마련('19)하고, 농가단위 빅데이터(거대 자료) 수집 확대('18: 243호 → '19: 373)
 - 스마트 팜(첨단 농장) 장비 간 호환성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자재 국가표준 제정('18: 시설원예 22종 → '19: 축산 11종)

[농식품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(첨단화) 추진]

-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(첨단) 농업을 축산·밭농업으로 확대
 - 온·습도 관리와 먹이 공급 등을 자동화하는 스마트(첨단) 축사 확대('18: 600호 → '19: 800), '스마트(첨단) 축산 ICT(정보통신기술) 시범단지' 조성('19: 3개소)
 - 데이터(자료) 기반으로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 확산('18: 5개 → '19: 10)
 - * (기존) 자동 물공급 모델 → 드론(무인기)·영상분석 장치를 활용한 방제 등으로 확대
- 유통·수출 등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스마트화(첨단화) 추진
 - 빅데이터(거대 자료)와 드론(무인기)을 활용해 배추 등 채소 수급 예측을 고도화,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범사업('19.1~) 추진
 - 농산물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 이력관리 지원('19: 157개 수출단지)
- 농지·품목 등 영농정보와 전자지도(팜맵) 통합·활용 시스템 시범 구축('19년)

가. 현황

- 쌀 직불제는 가격 하락시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나, 공급과잉 심화·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미흡 등 한계 노출
 - 쌀 농가의 비중 감소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에 한계
 - * 쌀 농가 (전체농가 대비 비중) : ('05) 938천호 (74%) → ('17) 579천호 (56%)
 - 면적에 비례한 지급체계로 대규모 쌀 농가에 직불금 지원이 편중되어 쌀 이외의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 미흡
 - * '17년 1ha미만 쌀 농가(72%)는 직불금의 29% 수령, 3ha 이상(7%)은 38%
- 환경보전, 공동체 유지, 경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
 - 현행 직불제 이행의무는 공익적 기능의 적극적 창출에 한계
 - *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, 농약,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기초적인 수준 요구
 - * EU : 수질 오염 관리, 동물 서식지 보호, 농약의 관리 기록 증빙(살포시기·대상작물·사용량)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상호 준수 의무로 설정

나. 추진계획

◇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 추진

품목	▪ 직불금의 81% 쌀농가 지급	→	▪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
지급 방식	▪ 면적비례 지급으로 대농 유리	→	▪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체계
지급 조건	▪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	→	▪ 공익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

□ **쌀·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·중소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**

○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(고정·변동)·밭·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, 작물·가격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

- **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(기본직불금)을 지급하고,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 우대**

- **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·환경 관련 준수 의무 강화**

* (예시) 농가: 벼짚 등 농지 환원, 생태교란 식물 제거, 생태 수로 및 둠벙(웅덩이) 조성
공동체: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, 저수지 주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

○ **농업인단체·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('19.상)을 거쳐 '20년 시행**

* 검토과제: 기본직불 수령자격·지급수준, 단가체계,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선 및 이행점검체계, 준수의무 설계와 수준 등

□ **개편 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대책 추진**

○ **논 5만5천ha('19년)에 쌀 이외 작물 재배 지원('18년 3만ha)**

○ **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·시장격리·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 마련('19.하)**

* 직불제 개편 시 벼 재배면적 감소로 쌀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, 대규모 농가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시장안정장치 마련

- **적정 가격대를 설정하고 가격·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 격리·방출 물량을 조정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**

□ **쌀 재배 농가의 작목전환을 돕기 위해 주요 작물 생산·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처 확대**

○ **재배단지 조성, 쌀 이외 작물 기계화('17: 58% → '22: 75%), 배수 개선**

○ **TRQ* 증량 최소화·정부수매 확대(논콩 전량 수매, 밀 비축제 신규 도입 등) 및 군급식·학교급식 공급 등 소비기반 확대**

* TRQ(Tariff rate Quotas):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하는 것

가. 현황

□ 「재생에너지 3020」 계획에 따른 농촌지역 목표*를 달성하고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 활성화 필요

* 농촌지역에서 '22년까지 3.3GW, '30년까지 10GW(누적) 태양광 공급 목표

○ 그동안 농지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사업 공급 기반 확대

-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50% 감면('18.2월)
-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허용 건축물 확대('18.5월)
- 농업진흥지역 밖(생산·보전 관리지역) 태양광 설치 전용면적 확대('18.5월)
- 염해 간척지 일시사용기간 연장('18.12월 법 개정 완료)

○ 영농형 태양광 관련 실증연구('16~'19, 농식품부), 시범사업('18, 산업부) 추진

□ 농촌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대, 이익 공유 등이 필요하나, 관련 여건은 미흡

* 농촌지역 송배전 설비 부족, 초기 투자 부담, 환경·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의 태양광 사업 참여는 소극적인 편

○ 농업인의 자금·정보 부족, 지원체계 부재 등 보완 필요

나. 추진계획

◇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 마련·확산

◇ 유희농지·염해간척지 등 비우량농지 위주 활용

주민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지인 사업자 중심 	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농업인·지역주민 참여, 발전수익 공유
수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구별 실현가능성 검토 미흡 	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수지 기능유지, 주민동의, 경관유지 환경·안전이 확보된 지구 우선 추진
육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농지 제도개선, 설치자금 용자(산업부) 중심 	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컨설팅, 지역별·작목별 재배방법 개발, 기술지도 등 병행 지원

- (주민 참여형 모델) 농어촌공사,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('19.초)·확산
 - 농어촌공사(수상), 농협(육상)이 중심이 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수익금 사용 용도 확대(공사), 출자 승인(농협) 등 관련 제도 개선('19.상)
 - 농지 내 설치하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계획 입지 방식 추진
- (수상 태양광) 국회, 민원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방향 정비
 -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하여 저수지 기능 유지, 경관 유지, 주민 동의, 환경·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추진
 -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대상 지구(899개)를 대상으로 세부 추진여건(계통연계, 주민동의, 인허가 등)을 검토하여 사업 계획 구체화('19.초)
- (영농형 태양광*) 시범 사업, 실증 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
 - *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
 - 실증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,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('19.초)하고, 컨설팅, 재배모델 개발 등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('19.하)
 -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에 대해 일시사용기간 연장(8→20년) 추진('19.하)
- (제도·조직) 농촌 태양광 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-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('19.상)
 - 주요내용 : 정책자금지원, 부담금 감면, 우선구매, 컨설팅 지원 등
 - *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('18.12월, 의원입법)
 - 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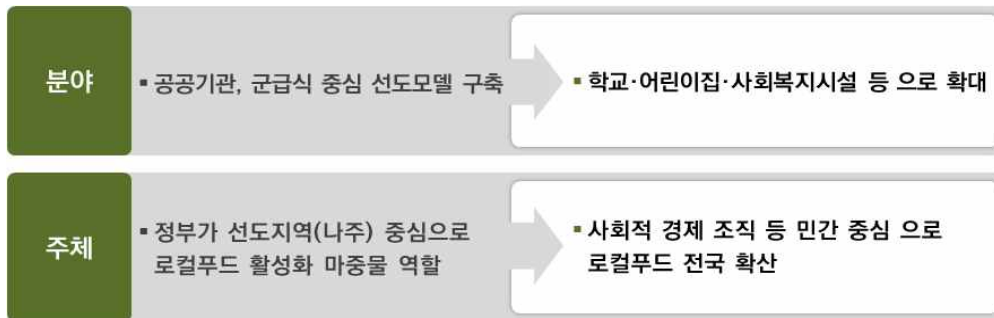
가. 현황

- 현행 농산물 유통체계는 도매시장 경유율('17 : 53.4%)이 높아 유통 거리가 길고, 과도한 유통 비용 발생
 - *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구성비('17) : 유통 비용 44.4%, 농가 수취 55.6%
- 특히, 중소농에게는 도매시장이 운송 비용이 높고 가격 변동이 심하여 안정적인 출하처가 되지 못하는 상황
 - * 중대농은 생산 물량의 46.5%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반면, 중소 단위 농가는 32%, 소단위 농가는 27.2%만 도매시장에 출하(농경연, 경기·전남 표본조사. '16)
- 중소농에게 제값 받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국내외 다양한 지역단위 소비체계 모델 등장
 - 미국(파머스 마켓), 일본(지산지소)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중소농들이 지역사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체계 구축
 - * 일본: 도도부현 단위로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사용률 목표를 30%로 설정('12:25%)
 - 전북 완주의 경우 로컬 푸드(지역 먹거리) 직매장에 외식, 가공,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
 - * 지역 일자리 659명 직접고용, 참여농가(2,526개)에게 평균 月170만원의 소득보장
- 지역 내 농산물 공급-소비체계는 중소농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,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어 확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
 -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단체 급식 및 군 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 추진('18.9~)

나. 추진계획

◇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·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 단위 유통 체계 단계적 확산

※ 로컬 푸드(공공급식·직매장 등 지역 먹거리) 유통비중 : ('18p) 4.2% → ('19) 6% → ('22) 15%



□ 공공기관 급식(나주) 및 군 급식(화천, 포천) 선도 모델을 통해 중소농 소득 제고,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 달성('19.상)

○ (공공기관) 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(14개)으로 공급 대상을 늘리고,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품목·물량 및 출하농가 지속 확대

* ('18.8) 공급품목 16개, 출하농가 9호 → ('18.11) 71개, 47호 → ('19) 150개, 100호

- '19년 수요량을 분석하고 참여 농가를 확대하여 품목별 기획생산 체계를 마련하고, 가공식품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육성

○ (군 급식) 로컬 푸드(지역 먹거리) 확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,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신규 생산 가능품목 선정 및 지역 중소농 중심 농가 조직화

* (화천) '17 : 지역농산물 31% → '22 : 76.7, (포천) '17 : 33% → '22 : 70.8

○ 소득증대, 유통비용 절감 등 로컬푸드(지역 먹거리) 공급 효과 실증 분석('19.하)

□ 혁신도시(10개, 공공기관)와 접경지역(15개, 군급식)으로 선도모델 확산

○ (수요확보)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'로컬 푸드(지역 먹거리) 구매실적'을 추가하고 군 급식 관련 협정서(국방부-농협)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 반영

- (공급기반) 지역 농산물 생산현황, 물류시설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원
 - (제도개선) 군 급식에 로컬 푸드(지역 먹거리) 공급이 확대되도록 군납 초기부터 이어져 온 단지장제도* 폐지 추진(국방부 협조)
 - * 일정 수수료(3~6%)를 받고 농가관리, 납품농산물 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유통체계
-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로컬 푸드(지역 먹거리) 소비체계 전국 확산
- (행정지원)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독려('18:8개 → '19:20개) 하고,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('19.상)
 - 완주 등 우수사례에 대한 운영 매뉴얼(지침) 제작·보급
 - (기반 구축)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종합 지원('19: 7개 사업→'20: 12개)
 - 지역 농산물 공급 종합계획을 마련한 지자체 우선 지원
 - (체계 마련)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산자대표-수요처 등이 참여하여 가격·공급 규모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민·관 협업 체계 마련
- 민간의 다양한 로컬 푸드(지역 먹거리)·직거래 우수 모델 발굴
-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, 경영 컨설팅(상담)·대국민 홍보 등 지원
- ◇ (사례1) 광주 광산구청에서 사회적 기업(쥬워킹맘)과 연계하여 아파트 주민 대상 조식 제공
 - ◇ (사례2) 화성시 소비자협동조합 '꿀밥'에서 아파트단지별로 사전 주문을 받아 지역 농산물을 배송 날짜에 맞추어 꾸러미 형태로 배송(Fribox)
- 산발적으로 생산되는 로컬 푸드(지역 먹거리)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농가 조직화 등을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
 - * 저장 및 가공시설 지원 등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도 포함되도록 개선('19)

가. 현황

- 농약 오남용을 줄이고 안전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'19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(PLS*) 전면 시행
 - * Positive List System :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로 기준이 있으면 해당 잔류기준, 없을 경우 일률적인 0.01ppm의 잔류기준 적용
- 사용이 허용된 농약을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('18.8)을 추진하였으나, 영세농·고령농 중심으로 인지도가 낮아 부적합 농산물 증가 우려
- 축산업의 규모화, 농가소득 증가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질병·약취·안전 문제 해결 시급
 - 조류 인플루엔자(AI)·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축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 최소화를 위한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필요

나. 추진계획

◇ 생산 단계의 철저한 질병·안전·약취 관리 → 농축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

* 농산물 부적합률 : ('17) 1.9% → ('19) 1.8 → ('22) 1.0



[농축산물 안전 관리]

-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(PLS) 조기정착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
제도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
 -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약 안전사용 요령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희망농가 대상 사전 안전성 조사 지원
 - 농약 판매상을 통해 등록된 농약정보 등을 현장에 전파하고, 농약 판매 기록 유지(9개 농약 → 모든 농약) 등 의무 부여

-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부적합 농산물 유통 신속 차단
 -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 조사(조사비중 확대, 4.4%→8), 산지 농산물이 집중되는 유통경로의 무작위 안전성 조사 강화
 - 부적합이 의심되는 농산물의 경우 시료 수거·조사 등이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의무 삭제 등 제도 개선
 - 휴·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내 식용작물 재배를 제한하고, 용도전환·휴경 후 토양정화, 비식용작물 전환 등 지원
 - 농식품부에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인력·조직을 확충하고 안전성 검사기간을 단축(7일→3)하여 위해 우려 농산물 유통 차단
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^{*}), 이력제 등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·유통 지원
 - *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가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
 - 소비자가 HACCP 인증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대상 확대('19, 도축장·가공장만 표시 → 농장까지 확대)
 -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(GP) 유통 의무화, 가금·가금산물(닭·오리·고기, 계란) 이력제 도입('19.12) 등을 통해 축산물 위생적 유통 지원

[축사 사육환경 개선과 철저한 가축방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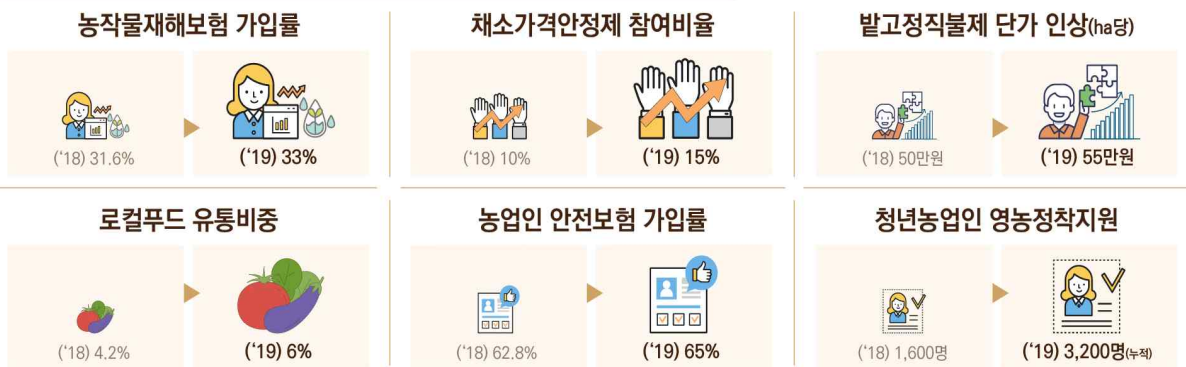
- (사육 기준) 질병·악취·안전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사육 기준 강화
 - 오리농가의 사육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·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신설
 -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종계·부화업 동시 경영시 시설 분리 의무화
 - 사육단계에서의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 준수사항 보완
 - * (189 시행) 사육시설 위생 관리, 사육시설 내 전용 작업복·신발 착용, 동물약품 및 농약기준 준수
 - (보완(안) 투약 지도에 따라 동물 약품 사용, 출하 전 절식(음식물 섭취 금지) 권고 준수 등
 - 부숙이 안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확대 시행(19.3, 환경부)하고, 부숙도 측정기 보급 및 농가 지도·점검 강화
- (점검·지원) 기준이 준수되도록 점검 체계 개편 및 지원 강화
 - 농가가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고를 실시하고, 관련 기초 자료(DB)를 연계하여 상시 점검·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
 - 축산 관련기관에 점검 권한을 부여하여 준수 여부 수시 점검하고, 위반시 과태료 상향, 과징금 신설 등 제재 강화
 - 가축 분노 문제 해결 및 토양 개선을 위해 퇴비·액비 품질 제고, 사용 농가 지원 강화, 성공모델 발굴·확산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
- (방역) 사전 대비 체계를 정비하고, 질병 발생 즉시 확산요인 차단
 - (AI) 철새 도래지 예찰 확대(88개소→96), 도축장 연중 검사로 발생 조기 확인
 - 발생 시 3km 예방적 살처분, 이동제한 등 신속 초동조치와 특별방역팀 파견
 - (구제역) 국내 발생 유형의 백신 접종 관리 강화, 백신 미접종 중이나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1(아시아1)형은 백신 비축 확대(19.9)
 - (아프리카돼지열병) 탐지견 추가 투입 등 발생국에서 오는 항공노선의 휴대품 검역을 강화하고,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관리 철저

IV.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

• 농업·농촌의 일자리 기회가 확충됩니다.



• 농업인은 소득 걱정을 덜게 됩니다.



• 농식품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합니다.



•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.



• 농촌은 누구나 살고싶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.

